

# 속도붙는 군산·울산형 일자리...옆친데 덮친 광주형일자리

광주형일자리가 위협 받고 있는 것은 '노사상생형 일자리'라는 화두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던지고도 각종 잡음에 휩싸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다. 자동차공장을 짓고 운영할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이사진 자질 문제,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지역사회, 정당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정치권과 광주시, 사측이 대치하면서 사업은 수개월째 헛바퀴를 돌고 있다.

그러는 사이 후발주자격인 울산형일자리, 군산형일자리는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친환경자동차(완성차 또는 부품 생산) 사업으로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직접 위협하는 경쟁자로 평가받지만, 정작 (주)광주글로벌모터스 1대 주주인 광주시는 느긋한 모습이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밝은 복수 관계자들은 "지엠(GM)공장 폐쇄 영향때문인지 군산형일자리 참여 당사자들에게는 절박함이 있다. 울산형일자리는 현대모비스 등이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친환경차 부품 공장을 짓는 사업으로 이미 기공까지 마쳤다"며 "제한적인 자동차산업에서 광주 울산 군산이 모두 경쟁자일 수밖에 없다. 광주가 절박함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표이사 등 리더십 부재 논란  
노동이사제 도입 내부 잡음에  
속도 못내고 수개월째 헛바퀴  
군산, 상생협약식 사업 본격화  
울산, 현대모비스 3600억 투자  
광주와 살아남기 경쟁 불가피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산구 빛그린산단에 3000억원을 들여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자동차 부품 인증센터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광주로 올 현대모비스 부품공장이 울산으로 간게 아니냐는 불만과 우려도 작지 않다. (주)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이 2021년 내연기관 경형 SUV차 양산으로 출발하지만 친환경차량 시장이 커지면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으로 생산 전환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광주가 군산과 울산에 밀려 친환경자동차 중심도시 지위를 결구엔 빼앗기고 기업 투자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속도 붙는 군산·울산형일자리= 전북 도는 오는 24일 옛 한국지엠 군산공장(현 명신공장)에서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을 열고 본격 사업 추진에 나선다. 군산형 일자리는 명신그룹이 주축이 된 '명신 컨소시엄'과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MPS코리아가 중심이 된 '새만금 컨소시엄' 등 2개 컨소시엄으로 진행된다.

참여기업은 2022년까지 4000억원을 투자해 중국 전기차 17만여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직접 고용으로만 일자리 1900여개가 생겨난다는 분석이 있다.

광주형일자리와 달리 '기업투자형' 일자리이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참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지역 노동계 인사는 "군산형일자리에는 절박함이 있다. 광주와 달리 잡음 없이 일이 추진되는 점이 특히 부럽다. 쇠락한 군산 경제를 일으켜보자는 교수와 연구자 등 학계와 지역사회의 헌신도 눈물겹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중국 브랜드로 전 기차를 출시하겠지만 이러한 강점들이 결국 광주형일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 내수 시장이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경쟁자 아니냐"고 지적했다.

울산형일자리는 현대차·롯데·한화그룹 등의 대규모 투자로 시작했다. 유통·관광 사업 등 여러 사업이 있지만 친환경차 부품단지 조성사업이 광주와 겹친다. 협력사와 함께 3600억원을 투입키로 한 현대모비스는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 참석 아래 친환경자동차 부품공장 기공식을 여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헛바퀴 도는 광주형일자리=광주·군산·울산 등에서 하나같이 자동차산업을 매개로 일자리 사업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향후 시설 투자는 물론 내수 시장에서 중복·과잉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자동차산업에 밝은 관계자들은 "생산된 차량을 제대로 팔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중복·과잉투자가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안정화될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지형변화,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광주시와 (주)광주글로벌모터스의 움직임은 한가롭게 비쳐진다.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된 박광태 전 시장과 부시장을 맡은 현대차 출신의 박광식 이사는 이날 들어 사무실에 출근해 정상 업무를 보고 있지만, 선임 과정에서 두 이사 모두 이미 리더십에서 타격을 받은 상태라 운신의 폭도 매우 제한적이다. 노사상생형 일자리이지만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 사회적 복지 내용도 구체화되지 않은 점도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밝은 한 인사는 "광주형일자리가 외부에서 위협을 받고, 내부에서는 난제가 쌓여가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맡아 말끔하게 정리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누구도 먼저 양보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명패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종교지도자들이 21일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검찰개혁·한일갈등 해법 메시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에 나선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이번 연설은 513조 5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집행정책 기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국회가 원활한 예산 심사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또 최근 국제시장의 불확실성 기조와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속에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절박한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입법에도 힘써달라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시정연설은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한층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분리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또 검찰 개혁 등 중단 없는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언급도 연설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나투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발일하고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면담할 예정인 만

큼,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한일관계 해법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구상도 밝힌다. 문 대통령은 현재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및 남북관계 진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있지만, 한국 정부는 끊임없는 대화 노력을 통해 평화를 앞당기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여야 '자녀입시 전수조사' 법안 앞다퉀 발의...조사범위서 차이

민주·바른미래 이어  
한국당 금주내 발의 예정

여야가 대학 입시를 비롯한 교육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자녀의 대학입학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법 발의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1일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신보라 의원이 대표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학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을 금주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6일 김수민의

원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제출한 상태다. 각당의 안은 전체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교육의 공정성 제고를 기하겠다는 취지는 같지만 조사 대상의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로 한정했다.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30명 이내로

구성된 조사단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한국당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할 법안은 적용 대상을 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로 한다. 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법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되,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했다. 조사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차관급·청와대 비

서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성급 장교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국회가 선출하는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하되, 여당에서 추천하는 3명과 야당에서 추천하는 6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위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 요청이 있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쳐도록 했다.

만약 1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은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1개월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했다.

/연합뉴스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